

# 예결위, 2018 예산안 · 2017 추경안 의결

### 2018년도 예산안 전북도 6조 4020억원 · 도교육청 3조 3055억원... 2017년도 정리추경안은 원안 가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영일 위원장(순창)/11명)는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6조 4,079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과 6조 3,80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 3,157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3조 1,927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안 등 총 11건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차례 걸친 예산안 심사로 전라북도 2018년도 예산안 총 6조 4,079억 원 중 '전라북도 명예도민 사후관리 1,500만 원' 등 42건 59억 원을 삭감하여 6조 4,020억 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도교육청 2018년도 예산안은 총 3조 3,157억 원 중 '교육장 해외연수 8,000만 원' 등 15건 102억 원을 삭감하여 3조 3,055억 원으로 조정,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2017년도 정리추경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라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사항으로는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도비 지원액과 관련, 2019년부터는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집행부가 요청한 15%(도비 51억 5,000만 원)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내년 예산 중 증액된 2023세계캠버리대회 예산 13개사업 19억 7,000만 원 중 민간 경장보조사업 4개 사업 3억 2,000만 원은 캠버리특별법 제정 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삭감했다.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 선포식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 선포식에서 우원식(오른쪽 다섯번째) 원내대표, 조정식(왼쪽 두번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임종성(왼쪽 네번째) 의원, 한정애(오른쪽 세번째) 의원, 배우 백성현(왼쪽), 아이돌그룹 인피니트가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새정부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는 시·군의 일자리창출 노력도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예결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로 반영한 '일자리시책 추진 우수 시·군 지원사업(3억 원)' 등 일자리 관련사업 92개 사업 1,783억 원은 전액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 외 부대의견으로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사업'과 관련, 시군부단체장을 포함한 헬기선정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요구한 익산 해동환경 불법폐기물 매립에 따른 침출수 처리비용 정부예산 15억 원은 내사가 되지 않아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함께 추가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신규로 요청한 교원 해외연수 예산 3개 사업 2억 원과 토목·협력형 수업용 토론회습실 지원 예산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불용액이 많은 정규직인건비 예산 55억 원 삭감 조정했다. 최영일(순창)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와 관련 "내년도는 민선6기 도정 핵심사업의 결실을 맺고 민선7기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과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안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3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진성 기자

## 서남대 폐교 위기에서 구해주세요

### 박희승 위원장, 기자회견 후 정치권에 부탁

박희승 지역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사진)과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부의 무언척한 정책을 비판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부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서남대학교가 전북 동남권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대학 폐교만은 피할 수 있도록 청와대, 추미애 당대표와 교육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정치권에 간곡한 요청을 했다. 김춘진 전북도당 위원장도 나서서 서남대 기자회견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치권과 협력했다.

폐교 위기로 몸살을 앓던 서남대학교 이사회가 부산의 온종합병원이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받아 11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향후 사분위에서는 설립자의 횡령금 333억 원에 대한 보전시기를 놓고 서남대 대학위 측 등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남학원 임사이사회는 학교 인사의사를 밝힌 온종합병원을 새로운 재정기여자로 선정하고 온종합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학교 정상화에 대한 병원 측의 의지와 재정 상황 등을 분석했다. 온종합병원 김인세 의료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교직원들의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해 현금 200억 원을 투입하고, 6개월에서 1년 이내 나머지 횡령금 133억 원을 단계적으로 발전기금으로 내부를 계획이라고 했다. 궁극적으로는 5년 이내에 1천억 원대 가치의 온종합병원을 서남대 의대 부속병원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학교 정상화의 전제조건이 333억 원의 일시 보전과 관련하여 온종합병원 측은 "우선 200억 원에 달하는 교직원들의 체불 임금부터 해소 후 단계적으로 보전할 계획이며,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할 계획이니 횡령금 보전 절차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을 비롯한 서남대 대책위 관계자들은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서 당장 폐교방지가 정해진 서남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이고, 현 상황에서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를 강행하면 폐교 시 비리설립자는 횡령금 전액을 탕감받게 되고, 법인 청산 뒤 예상되는 500억 원의 잔여재산도 자녀들이 운영하는 다른 사학으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희승 위원장은 "서남대 정상화 대책위, 정치권과 함께 온종합병원의 학교 정상화 계획서가 교육부 등에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재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학습권 및 동북 지리산권의 균형발전 및 교육 평등권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글로벌 온라인 캠퍼스가 가능한 현 시대에 서남대는 남원을 넘어 지리산권과 더불어 상생하는 대학으로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보다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서남대를 살려 최후 대학 건립 목적인 동북 지리산권의 균형발전과 교육 평등권에서 차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 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강제조정안 수용 결정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 수용을 결정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원고인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추가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소송철회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뉴시스

## '알박기' 인사 전북도, 지방분권 주장 자격 있다

### 양성빈 의원, 시장·군수 부단체장 임명권 침해·5급 사무관 일방 진출·장기교육 도가 독식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정수군)이 12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도의 '알박기' 인사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성빈 의원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부단체장 문제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장·군수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도의 서기관 또는 부이사관급이 시군으로 가서 임기 마치고 또 다시 도 인사와 맞고대하고 있다. 이는 법률이 보장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군 자체승진을 통한 부단체장 보임 기회가 사라져 일선 시군의 사기와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급 사무관의 경우도 도 사무관이 일방적 진출로 시군에 내려감으로써 일선 시군의 사무관 승진요인을 도가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올 11월 기준, 6개 시군으로 진출이 있는 총 7명의 도 사무관들은 행정직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소수직렬들이어서 시군의 인사체계를 이종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끝으로, 4급 및 5급의 장기교육 혜택도 도가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어 교육기회 박탈은 물론, 장기교육에 따른 승진요인도 차단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이후 10년 동안 도내 4급 장기교육자 총 47명 중에서도 4급은 31명 시군 4급은 16명이고, 5급 장기교

육자의 경우 10년간 79명 중 도가 45명, 시군이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직급별 정원기준에 견줘보면 4급 장기교육자는 도의 경우 정원 대비 47.7%, 시군은 14개 시군 전체 정원 대비 불과 21.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양성빈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 간에 체결한 '전북도 지방공무원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협약서'가 2014년 6월을 끝으로 효력을 잃은 이후 협약을 갱신하지 않고 있는데, 도지사 및 시장군수들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시군 인사교류의 상호 호혜성을 확보하고 시군에 대한 도의 분권 의지를 먼저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